

싱크탱크 위클리

문의: 워싱턴무역관 정세원 과장(sawon@kotra.or.kr) 2023.5.8.(월) 제23-51호



◆ [Think Tank]

- (투자) 미국 해외투자심사제도 강화 노력과 향후 전망 (CSIS)
- (경제안보) 중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한미 안보협력 필요성 (CSIS)
- (무역) 미국 국제화 정책,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브루킹스, CSIS)

◆ [의회동향]

- 한국 전문직 비자(E4) 신설 법 상·하원 발의(S.1301, H.R.2827)
- “태양광전지 및 모듈 우회수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유예” 무효화 결의안(H.J.Res.39) 상원 통과(5.3)
- 부채한도 상향 및 예산안 조정법(H.R.2811) 하원 통과(4.26)
 -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영된 친환경 인센티브 축소 내용 포함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깊어지는 고심

싱크탱크

[투자] 미국의 해외투자심사제도 강화 노력과 향후 전망 (CSIS)

- 미국의 국가안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움직임 연이어 포착
 - CSIS,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4월 27일 브루킹스 연설을 언급하며 조만간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s) 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조치 가능성 시사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 기술 분야 해외투자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는 중국이 말하는 기술 봉쇄가 아닌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강조
- 해외투자심사제도 배경
 - ‘18년 수출통제개혁법 (ERCA: Export Control Reform Act) 초안 및

'22년 반도체 법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에 포함하고자 했던 투자통보제도 (Notification Regime)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 보안을 위한 특정 금지 거래 항목 추가 제안

□ 해외투자심사제도 도입 사례: 대만과 한국

- 대만은 외국투자부 (Ministry of Foreign Investment)에서 해외투자 규제 담당, 경제부 투자위원회(MOEAIC)에서 해외투자 심사 주관
 - 해외투자 5천만 달러 미만은 신고, 5천만 달러 이상은 정부 검토 필수
 - 대만의 1992년 대만지역 및 대륙 지역 인민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국내 기술 투자 시 중국의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고기술 산업 투자는 금지되어 있음
 - 중국 투자 시 일반 범주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순자산의 60% 또는 \$200만 제한, ②개인 한도는 \$500만, ③대기업의 경우 60%로 설정
- 한국의 경우 해외투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투자심사 담당
 -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보 및 국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기술의 부당한 유출 방지 및 보호를 목적
 - 인수, 합병 및 합작 검토 권한을 정부에 부여, 생물 공학 및 배터리 기술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목록의 유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해외투자심사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미국의 고려 사항

- 해외투자심사제도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
 - ① 우려되는 외국 기업으로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입수 가능 여부, 정보 입수 및 분석에 따른 재무부의 업무 가중 가능성
 - ② 노하우나 연금 기금 투자와 같은 수동적 투자 포함 여부 및 투자 (합작투자, 자본투자, 합병 및 인수 등)정의에 대한 심사의 문제

- ③ 미국 정부의 강화된 감시에 대한 의회 양당의 회의적인 반응
- ④ 미국 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준수 부담
 - * 반도체 기업들의 CHIPS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 ⑤ 동일한 거래에 대한 국가 간 규정의 상이한 적용 방지를 위한 투자 심의 체제 다자간화
- ⑥ 미국 자본의 중국 업체 투자로 인한 미국 경쟁 업체 침해 가능성

□ 결론

- 새로운 사전심사제도는 미국에게 고도화된 기술과 국가 안보 확보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
 - 최근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 상황을 고려, 국가 안보 기반 마련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문현주 과장
- 발간기관 : CSIS
- 발간일자 : 2023년 4월 27일
- 보고서명 : [The United States Prepares to Screen Outbound Investment](#)

[경제안보] 중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한미 안보협력 필요성

- 中 원자력 수출은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 해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구성 요소
 - 중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의 후발주자에도 불구하고, 첨단 원자력 기술, 가격 경쟁력, 안정적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455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를 30개 이상 건설하겠다는 계획 발표
 - 최근 중국은 이미 건설된 4개의 원자로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영국,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고온가스냉각 원자로 기술 기반의 4세대 원자로를 그리드에 연결하고, 국제 원자력기구로부터 SMR(소형모듈 원자로)에 대한 최초 승인을 획득했으며,
 - 향후 15년 동안 원자력 발전 부문에 최대 4,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의 국영 은행이 원자로 건설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세계 원자력 시장의 주도권을 점차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
 -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과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해상을 연결하겠다는 新 실크로드 전략으로써, ‘13년 9~10월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제시
- CSIS, 中 원자력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확장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원자력 리더십 이동 가능성 제기
 - 대규모 장기 운영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원자력 협력이 국가 간 의존도 심화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
 - 중국의 원자력 발전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위협이 가능하며, 공급망 재편과 채권 스와프 등 보복성 조치 리스크를 지적
 - 최근 미국은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 유럽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 주도하는 원자력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언급
- 반면, 5G나 고속 열차와 같은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국과 협력 중인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 국가 등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중국의 원자력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

□ 중국 원자력 기술 확장의 효과적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

- 미국은 중국의 핵 수출 억제를 위해 우수하고 저렴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매력적인 자금 조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
 - 중국 원자력의 가격 경쟁력과 자금 동원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은 원자로 설계와 유지·운영 지원을, 한국은 장비와 공사를 지원하는 공동 수출 사업 추진을 제안했고,
 - 양국 간 R&D 노력을 모아 차세대 원자로 모델을 공동 개발함과 동시에 한미 공동 자금 조달 계획을 고안할 것을 요구
 - 한미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분쟁의 갈등을 극복하고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김용성 과장

○ 발간기관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발간일자 : 2023년 4월 24일

○ 보고서명 : [Nuclear Belt and Road and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국제관계] 미국 국제화 정책,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움직임, 미국의 공급망 붕괴, 보호무역 정책 부상에 따라 미국 국제화 정책에 엇갈린 평가 지속
 -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경제 리더십 쇄신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제화, 시장주도 정책의 개선 필요점을 언급(4월 27일, 브루킹스)
 - 공공 지출 억제, 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사업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 개방이 포함된 “미국의 국제화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원활히 작동하기를 기대했으나 시장정책 실패를 경험했다고 언급하며,
 - 이로 인해 ①미국의 산업기반 약화, ②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적 경쟁 가속화, ③기후위기, ④민주주의 붕괴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
 - 현재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 도입을 통해 정부차원의 전략분야 대상 장기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 동 연설에 대해 CSIS 윌리엄 라인쉬 국제 비즈니스 수석 고문은 미국의 지난 국제화 정책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음을 강조
 - 미국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세계의 빈곤을 완화하는 것에 기여했으며,
 - ‘국제화를 추구했던 과거의 주요 국제경제 프로젝트는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만을 주요정책이었던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며 국제화 정책을 통하여 지적재산권보호, 정부조달, 무역촉진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 관심 유도 등의 긍정적인 부분 강조
 - 미국의 산업이 약화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은 국제화 및 자유경제의 실패 탓보다는 자연적인 경제의 원리 적용한 결과임을 언급

- 새로운 경제 정책 중의 하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담에서 미국은 양보의 의지 없이 미국의 기준과 관행을 반영한 정책 설립을 위한 합의점을 찾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찾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성공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 제기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James Lee 자문관, 전태리 팀장
- 발간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 발간일자 : 2023년 5월 1일
- 보고서명 : [So Long, Globalization?](#)
- 발간기관 : Brookings
- 발간일자 : 2023년 4월 27일
- 보고서명: [he Biden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agenda: A conversation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의회동향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인력	상원 하원	4. 25. 하원 발의 4.26 상원 발의	한국 전문직 비자(E4) 신설 법 (S,1301, H.R. 2827)* 한국의 전문직 비자(E4) 신설하여 연간 15,000개 비자 쿼터 제공	Gerald E. Connolly (D-VA-11), Mazie K. Hirono (D-HI)
			To provide highly-skilled nonimmigrant visa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관세	하원	3.7. 하원 발의, 4.28. 하원 통과, 5.3. 상원 통과	“태양광전지 및 모듈 우회수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유예” 무효화 결의안 (H.J.Res.39)	Bill Posey (R-FL-8)
			Disapproving the rule submitt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relating to “Procedures Covering Suspension of Liquidation, Duties and Estimated Duties in Accord With Presidential Proclamation 10414”	
부채 한도	하원	4.25. 하원 발의 4.26 하원 통과	부채한도 상향 및 예산안 조정 법 (H.R.2811)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영된 친환경 인센티브 축소 내용 포함	Jodey C. Arrington (R-TX-19)
			This bill increases the federal debt limit and decreases spending. It also repeals several energy tax credits, modifies the permitting process and other requirements for energy projects, expands work requirements for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nd other programs, and nullifies regulations for the cancellation of federal student loan debt.	

* 117대 의회에서 미국 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에 반영되어 하원을 통과 하였으나(22.2월), 상원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바 있음.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U.S. Exchanges List More Than a Dozen Cryptos the SEC Says Are Illegal to Sell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디지털화폐 감독 강화 움직임) 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암호화 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발간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Washington and Wall Street brace for White House debt ceiling talks (백악관 부채한도 협상, 심층협의를 중요해...) 공화당 의원의 부채한도를 활용한 정치 캠페인 본격화, 바이든 정부의 지출 삭감 논의. 백악관 부채한도 협상은 하원과 심층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New York Times	In Debt Limit Talks, Biden and Republicans Start Far Apart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계속 멀어져가는 바이든과 공화당) 오는 화요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디폴트가 다가오는 가운데 세금, 지출, 부채에 대한 세부 협의 예정. 바이든이 제시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공화당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어 우려 확대.

* 미국 동부시간 5월 8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US23-10	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3월
US23-09	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2023.03월
US23-08	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7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1 (2023.5.8)		
코인시-10 (2023.4.17)		